

86.9.5.11.22 무너지는 쌀 자급 정책

은다던 것이 예상보다 일찍 오는 것 같다. 쌀 자급에 적신호가 울리기 때문이다. 지난 90년 자급률이 109.9%에 이르러 생산 과잉의 불평을 토한 지 불과 5년 만인 올해의 쌀 자급도는 95.2%로 내려가고, 내년에는 한층 더 떨어질 전망이다. 올해 쌀 생산량은 3천2백60만섬으로 지난해에 비해 7.2%가 줄었으며, 최악의 흉작이었던 지난 8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재고 역시 4백70만섬에 불과해서, 국제식량 농업기구가 적정 수준으로 권장하는 2개월분의 소비량 6백만섬에도 못미친다. 우리 쌀이 모자라면 수입을 해서라도 북한에 쌀을 보내줬다고 큰소리친 것이 불과 서너달 전이었다.

과잉 생산으로 원성의 표적이던 쌀이 왜 이렇게 되었나? 근년에 우리 나라를 휩쓴 냉해나 홍수 등 환경의 변화도 단발적인 영향을 미쳤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에 있다. 농민이 벼농사를 기피하고, 농지가 해마다 줄어드는 것이 자급 기반 붕괴의 원흉이다. 벼농사를 피하는 이유는 다른 작물에 비해 수입이 적기 때문이며, 그래서 논에 다 채소와 과수를 재배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손 부족으로 품값이 오르는 바람에 논리는 땅이 해마다 늘어난다. 논이 밭으로 바뀌고, 농지가 공장지로 변하면서

금년만 해도 쌀의 재배 면적이 작년에 비해 4.2%나 줄어들었다.

이런 사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도 쌀시장 개방에 합의했을 때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올해의 추곡수매도 예외가 아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른 보조금 감축으로 정부는 작년과 같은 값으로 작년보다 90만섬이 적은 9백60만섬을 수매하기로 했다. 내년의 선거를 의식했음인지, 정부가 농협에 비료계정 차입금을 갚고 이 돈으로 농협이 1백만섬을 추가로 수매하게 하는 등의 편법으로 수매 비율을 가깝스로 29.4%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결국 이런 일과성 '선심'에 대달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농정 당국은 계절전복의 확대를 통해서 산지가격을 높이는 방법을 찾고 있다. 농민이 시장에 내다파는 값을 정부가 수매하는 값만큼 올림으로써 결국 수매 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다. 비교 우위와 시장 논리만으로 벼농사를 대하는 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42조원의 구조개선 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 사업이 그 '희망'을 떠받치고 있다. 그러나 보라, 내년의 예상 재고 2백78만섬은 한달 소비량에도 못미치는데, 거기에는 금년과 내년의 수입 쌀 80만섬이 들어 있다. 이제 우리는 억지로 쌀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 쌀이 없으면 굶는 형편이 되었다.